



4<sup>th</sup> Week January 2025

# 주간 도내언론 키워드 및 해외 정책동향

---

Vol. 26

---

# 주간 도내언론 키워드 및 해외 정책동향

## □ 주간 도내언론 주요 키워드

○ 제주지역 ①정치·행정, ②경제·관광, ③지역·사회 등 3개 분야 언론의 주요 키워드 분석 결과

분야	주요 키워드
정치·행정	평가, 개편, 대통령(탄핵), 인구, 연휴
경제·관광	관광객, 상승, 수출, 은행, 주택
지역·사회	대통령, 눈이, 어선, 도로, 항공

※ 분석 기간 : 25.01.23~25.02.05

대상 언론사 : 한라일보, 제주일보, 제주매일, 제민일보, 삼다일보, 제주의소리, 헤드라인제주

○ (정치·행정 분야) 주요 보도 내용(※ 9-10 페이지 참고)

정치·행정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 공사 투명성 제고</li> <li>- 교통문화지수 평가 개선</li> <li>- 항공안전 평가체계 개혁</li> </ul>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체제 개편 연기</li> <li>- 공공체육시설 보수 개편</li> <li>- 출산휴가 제도 개편</li> </ul>
	대통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헌재 탄핵심판 과정</li> <li>- 사회적 갈등 해소 방안</li> <li>- 탄핵 이후의 정치적 여파</li> </ul>
	인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 인구 고령화</li> <li>- 1~2인 가구 증가</li> <li>- 저출생 문제 대응</li> </ul>
	연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통 대책 및 혼잡 해소</li> <li>- 지역 전통 행사</li> <li>- 관광객 유치 및 서비스</li> </ul>

○ (경제·관광 분야) 주요 보도 내용(※ 11~12 페이지 참고)

경제·관광	관광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 관광객 감소</li> <li>- 설 연휴 관광객 예측 초과</li> <li>- 관광객 소비 감소</li> </ul>
	상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 소비자물가 상승</li> <li>- 제주 반도체 수출액 상승</li> <li>- 농산물 가격 상승</li> </ul>
	수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 주요 수출 품목 호조</li> <li>- 제주산 감자 국제 시장 진출</li> <li>- 농수산물 수출 확대</li> </ul>
	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은행 신임 은행장 취임</li> <li>- 농협 클린뱅크 인증</li> <li>- 금융 사기 예방</li> </ul>
	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 주택시장 침체</li> <li>- 공공주택지구 네이밍 공모</li> <li>- 농산물 통합 물류사업 확대</li> </ul>

○ (지역·사회 분야) 주요 보도 내용(※ 13~14 페이지 참고)

지역·사회	대통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탄핵 관련 법적 절차 논의</li> <li>- 정치적 영향과 여론 형성</li> <li>- 사회적 화합과 통합 방향</li> </ul>
	눈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 폭설 대응 체계 강화</li> <li>- 산간 및 해안 지역의 재난 안전</li> <li>- 지역 경제와 관광에 미친 영향</li> </ul>
	어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 어선 불법 조업 단속</li> <li>- 원거리 조업과 안전 문제</li> <li>- 선박 전복 사고와 대응 체계</li> </ul>
	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겨울철 도로 안전 관리</li> <li>- AI 기반 교통 체계 확대</li> <li>- 긴급 상황 도로 복구 및 지원</li> </ul>
	항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항공기 결항 및 운항 혼란</li> <li>- 항공 사고와 예방 조치</li> <li>- 제2공항 건설과 갈등</li> </ul>

## □ 주간 해외(아시아) 정책동향

### ○ 중국

- ✓ 중국 정부는 문화 체제 개혁과 문화 산업 발전을 위한 경제 정책 발표, 재정 지원, 세금 감면, 금융 서비스 확대를 포함한 지원책을 마련. 문화 창작 능력 향상, 공공 문화 서비스 접근성 강화, 문화재 보호 및 활용 확대가 주요 목표로 설정
- ✓ 중국 자연자원부는 토지 비축 관리 방안을 개정하여 국토 계획과 연계한 3년 단위 계획 도입. 활용도가 낮은 기존 건설용지를 우선적으로 비축하며, 비축 토지의 소유권 명확화 및 재정 관리 강화를 추진
- ✓ 중국 정부는 데이터 시장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 소유권 인정, 시장 거래, 권익 분배, 이익 보호를 포함한 ‘데이터 4차원 통합 제도’ 를 구축하여 디지털 경제 발전을 촉진
- ✓ 중국 정부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육 개혁을 추진하며, 교육 디지털화와 맞춤형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발표. AI 기반 평가 시스템 도입 및 교사의 AI 활용 역량 강화가 포함됨
- ✓ 중국 정부는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해 탄소 시장 강화, 제품 탄소 발자국 관리 시스템 도입, 탄소 라벨 인증 제도를 추진하며, 글로벌 탄소 시장과의 조화 및 저탄소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설정
- ✓ 중국 정부는 공공 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1+3’ 정책 체계를 도입하여 데이터 등록, 운영, 가격 책정 등의 핵심 정책을 추진하며, 기업과 연구기관의 데이터 공유 활성화 및 보안 강화를 추진
- ✓ 중국은 서남부 지역 전력 공급 안정성을 위한 초고압 교류 전력망 건설을 완료하여 청정 에너지를 주요 도시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산업 전반의 전력 비용 절감 및 생산 안정화 도모
- ✓ 중국 AI 스타트업 DeepSeek이 OpenAI와 경쟁할 수 있는 AI 모델을 출시, 비용 절감 및 효율성 극대화를 통해 글로벌 AI 시장에서 영향력 확대

- ✓ 중국은행은 향후 5년간 인공지능 산업에 1조 위안 금융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며, AI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데이터 센터 개발 등에 집중 투자
- ✓ 중국 정부는 의약품 시장의 독점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반독점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여, 가격 담합 방지,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금지, 공정 경쟁 원칙 강화를 목표로 설정

## ○ 일본

- ✓ 일본 국토교통성은 노토반도 관광 활성화를 위해 ‘노토반도 절경해도’ 조성 계획을 추진하며, 해안 경관 도로 개발과 관광 인프라 개선을 목표로 설정
- ✓ 후쿠시마현은 도요타자동차와 협력하여 수소 연료전지차를 활용한 전력 공급 실험을 진행하며, 지속 가능 에너지 활용 방안을 모색
- ✓ 도쿠시마현과 제주특별자치도는 관광 및 환경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수소 및 재생 가능 에너지 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을 추진
- ✓ 일본 국토교통성은 노후 인프라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 인프라군 재생 전략 매니지먼트’를 도입하며,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한 유지보수 강화 방안을 추진
- ✓ 오кина와현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온라인 진료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며, 의료 접근성이 낮은 관광 지역에서 원격 의료 제공을 확대할 계획
- ✓ 홋카이도 비에이정은 관광 과잉 문제 해결을 위해 방문객 대상 지속 가능 관광세 도입을 추진하며, 세수는 관광지 환경 개선 및 유지보수에 활용될 예정
- ✓ 이바라키현은 2024년 인구 이동 조사에서 젊은 층의 수도권 유출 증가로 인구 감소가 심화되었으며, 청년층 정착 유도를 위한 정책을 추진
- ✓ 규슈전력 자회사는 나가사키현에서 조류 발전 실증 실험을 본격 착수하며, 조류 발전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공급 가능성을 검증할 계획

- ✓ 간사이 국제공항은 태양광 패널 4만 개를 설치하여 공항 내 전력 공급을 확대하며, 연간 전력 소비량의 20%를 충당할 계획
- ✓ 일본 총무성은 도쿄로의 인구 집중이 심화되며, 지방 인구 감소 문제가 가속화되고 있어 균형 있는 지역 발전 정책 필요성을 강조
- ✓ 이시카와현은 노토반도 지진 피해 건물 철거 계획을 수정하며, 기존 예상보다 철거 대상 건물이 20% 증가함에 따라 폐기물 처리 방안을 강화
- ✓ 가나가와현은 2024년 전입 초과 인구 2만 6,963명을 기록했으나, 수도권 내 인구 이동 둔화 및 지방 인구 유입 감소로 인해 2년 만에 감소세
- ✓ 오사카부는 스카이드라이브와 협력하여 재난 대응을 위한 드론 물자 수송 시스템을 도입하며, 긴급 구호 물품 전달 체계를 강화할 계획
- ✓ JICA 요코하마센터는 6개국 정부 관계자를 초청하여 탈탄소 기술 및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 연수를 실시하며, 환경 정책 공유 및 협력을 확대할 계획
- ✓ 후쿠오카시는 AI 및 위성 데이터를 활용한 상수도 누수 탐지 시스템을 도입하여 유지보수 비용 절감 및 수도 인프라 효율성을 향상
- ✓ 후쿠시마현은 대형 태양광 발전소 개발 규제를 강화하고, 환경 훼손 및 불법 시공 방지를 위해 위반 기업 명단을 공개하는 조치를 도입

## ○ 태국

- ✓ 태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이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며, 태국의 글로벌 무역 플랫폼 내 위상 강화 및 외국인 투자 확대를 목표로 설정
- ✓ 태국 내 직장 내 AI 도입률이 21%로, 싱가포르 및 말레이시아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하며, 개인정보 보호 및 AI 활용 격차 문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

## ○ 필리핀

- ✓ 필리핀 정부는 중소기업 대출을 확대하기 위해 세계은행 산하 국제금융 공사(IFC) 및 아시아링크와 협력하여 1억 3,000만 달러를 투자
- ✓ 필리핀 정부는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해 인센티브 도입을 추진하며, 제조업 전반에 대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여 산업 성장을 촉진할 계획
- ✓ 필리핀 정부는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2025년 해외 채권 발행 규모를 35억 달러로 축소하고, 국내 차입 확대를 검토 중
- ✓ 필리핀 대통령은 테슬라의 전기차 생산기지 유치에 희망하며, 투자 유치 협상을 진행하고, 전기차 소비세 면제 및 충전소 설치 지원을 약속

## ○ 인도네시아

- ✓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5년 정부 지출을 27조 원 삭감하고, 의전 행사 및 출장 비용을 절감하며, 무료 급식 프로그램 확대를 위해 6조 원을 배정할 계획
- ✓ 인도네시아 정부는 외환보유고 확충을 위해 원자재 기업들이 수출 수익을 최소 1년간 국내에 보관하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
- ✓ 인도네시아는 국제 탄소거래소를 공식 출범하고, 탄소 크레딧 판매 수익을 신재생에너지 전환에 투자하며, 글로벌 탄소 시장과의 호환성 강화를 추진

## ○ 캄보디아

- ✓ 캄보디아와 필리핀은 디지털 기술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디지털 정부 서비스 강화를 목표로 교육훈련을 추진

## ○ 말레이시아

- ✓ 말레이시아는 AI 및 반도체 기업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국가 AI 사무소 설립, AI 법안 수립, 데이터 보호 조치를 포함한 프레임워크를 구축
- ✓ 말레이시아와 우즈베키스탄은 중소기업 및 프랜차이즈 부문 협력을 강화하며, 무역 및 투자 확대를 추진
- ✓ 말레이시아 경제부는 2028~2029년까지 선진국 지위 획득이 가능하다고 전망하며, 인프라 개선 및 경제 균형 발전을 추진

## ○ 베트남

- ✓ 베트남 정부는 해외 투자 유치를 위해 증권시장 개혁을 추진하고, 펀드 운용사에 대한 세제 혜택 및 수수료 인센티브를 도입할 계획

## Contents

---

- ☑ 언론분석: Word Cloud
- ☑ 해외(아시아) 정책동향



# 1

## 언론분석: Word Cloud

- 2025년 1월 23일~2월 5일 기간, 정치·행정, 경제·관광, 지역·사회 등에 관한 제주지역 7개 주요 언론사 보도자료는 약 1,379건임
  - 정치·행정 분야 523건, 경제·관광 250건, 지역·사회 606건임
  - \* 대상 언론사: 한라일보, 제주일보, 제주매일, 제민일보, 삼다일보, 제주의소리, 헤드라인제주
- 정치·행정 보도자료의 워드 클라우드를 살펴보면, 주요 키워드는 평가, 개편, 대통령(탄핵), 인구, 연휴 등으로 나타남



[그림 1] 정치·행정 분야 뉴스의 Word-Cloud

### ○ 정치·행정 분야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

정치·행정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 공사 투명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법선정위원회 운영 체계를 개편해 평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 예측 가능한 평가위원 명단 배제</li> <li>· 평가위원 선정 방식 개선. 평가 당일 청렴부서 입회하에 무작위 선정 및 다양한 공모 방식 도입</li> </ul> </li> <li>- 교통문화지수 평가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도 교통문화지수 상승, C등급에서 A등급으로 도약. 정지선 준수율과 방향지시등 점등률 우수</li> </ul> </li> </ul>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선 과제로 안전띠 착용률과 음주운전 금지 준수율 등에서 낮은 순위를 기록. 홍보 캠페인 강화 필요</li> <li>- <b>항공안전 평가체계 개혁</b></li> <li>· 최근 항공 사고 대응을 위해 항공안전 혁신위원회 운영. 민간 전문가와 제도 개선안 논의</li> <li>· 안전성 검토 강화, 공항시설 개선 등 항공안전체계 쇄신 목표. 3월 말까지 공청회 개최 예정</li> </ul>
<b>정치·행정</b>	<b>개편</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행정체제 개편 연기</b></li> <li>·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체제 개편 논의 연기. 주민투표와 공론화 과정 미흡 지적</li> <li>· 도민 의견 수렴 및 행정 구역 조정 검토 필요. 체계적 접근을 통한 사회적 합의 도출 요구</li> <li>- <b>공공체육시설 보수 개편</b></li> <li>· 전국체전 대비 노후 체육시설 개선 추진. 장애인 접근성을 포함한 편의 증진 계획</li> <li>· 지방비 포함 200억 원 투입. 체육시설 안전 확보와 이용객 편의 제고 목표</li> <li>- <b>출산휴가 제도 개편</b></li> <li>· 지방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사용기한과 분할 사용 횟수 증대로 복지 강화</li> <li>· 미숙아 출산 시 휴가 연장 혜택 포함. 공무원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li> </ul>
	<b>대통령</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헌재 탄핵심판 과정</b></li> <li>· 증인 심문 중 핵심 질문 다수 답변 거부. 대통령 지시에 대한 진위 논란 지속</li> <li>·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헌재 심판 진행. 주요 증언 및 심문 내용에 대한 법적 논의 심화</li> <li>- <b>사회적 갈등 해소 방안</b></li> <li>· 탄핵으로 인한 여론 갈등 심화. 통합 전략 마련 필요. 시민단체 공론화 요구 증대</li> <li>· 정치적 공백으로 정책 추진 정체. 경제적 불확실성 및 지역사회 협력 방안 모색 필요</li> <li>- <b>탄핵 이후의 정치적 여파</b></li> <li>· 탄핵 과정에서 권력 남용 및 지시 논란. 신뢰 회복과 정치 체계 개선 요구 증가</li> <li>· 탄핵이 남긴 과제와 교훈을 바탕으로 새로운 정치 문화 정립 기대</li> </ul>
	<b>인구</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제주 인구 고령화</b></li> <li>· 추자도 등 도서 지역 고령화 심각. 생산 가능 인구 감소와 지역 경제 악화</li> <li>·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체류형 관광 및 주민 참여형 프로젝트 추진 제안</li> <li>- <b>1~2인 가구 증가</b></li> <li>· 제주 가구의 63.2%가 1~2인 가구. 소규모 가구 수요 반영한 주거정책 필요</li> <li>· 맞춤형 공공주택 공급 계획. 2027년까지 109% 주택보급률 목표 설정</li> <li>- <b>저출생 문제 대응</b></li> <li>· 부영그룹의 출산장려금 지급 사례. 출산율 상승과 경제적 부담 완화 효과</li> <li>· 국가 차원의 출산장려정책 강화 필요. 기업 참여 통한 지속 가능한 정책 제안</li> </ul>
	<b>연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교통 대책 및 혼잡 해소</b></li> <li>· 폭설 및 한파로 대중교통 비상 대응 체계 가동. 버스 증편으로 출근길 대란 대비</li> <li>· 도민 안전 위해 월동장구 장착 권고 및 보행자 낙상사고 예방 조치 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관광객 소비 감소</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 대형 소매점의 1월 판매액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7% 감소. 관광객 소비 심리가 위축되며 주요 소비재 판매량 하락</li> <li>· 의복, 화장품, 신발 등 감소폭 가장 두드러짐</li> </ul> </li> </ul>
	<b>상승</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제주 소비자물가 상승</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월 제주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1.8% 상승. 배추, 무 등 주요 신선 식품 가격이 크게 올라 생활물가 부담 증가</li> <li>· 특히 무는 전년 대비 115% 폭등, 소비자 체감 물가 상승</li> </ul> </li> <li>- <b>제주 반도체 수출액 상승</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 반도체 수출액은 글로벌 IoT 및 AI 수요 증가와 단가 회복으로 전년 대비 5% 상승</li> <li>· 베트남과 대만으로의 수출 확대가 주요 요인으로,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수출 다변화</li> </ul> </li> <li>- <b>농산물 가격 상승</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 생산비 상승과 기후 영향으로 제주산 농산물 가격 급등</li> <li>· 감귤과 배추 가격이 대표적으로 상승하며 농가 수익 증가에 기여. 그러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부담 요인 작용</li> </ul> </li> </ul>
<b>경제·관광</b>	<b>수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제주 주요 수출 품목 호조</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 수출 주요 품목인 반도체, 의약품, 주류가 역대 최고 수출 실적 달성</li> <li>· 특히 반도체 수출은 1억 달러를 돌파하며 경제 회복의 중심축 역할. 신흥 시장 수출 확대도 기여</li> </ul> </li> <li>- <b>제주산 감자 국제 시장 진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 감자 품종이 나미비아에서 성공적으로 시험 재배 완료</li> <li>· 현지 연 2회 재배 가능성 확인으로 식량 자급률 향상 기대하며 품종 통상 실시권 계약 체결 준비 중</li> </ul> </li> <li>- <b>농수산물 수출 확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키위와 넉치 등 농수산물 수출이 호조를 보이며 농가 소득 증대</li> <li>· 특히 베트남과 대만 등 신흥시장에서의 수요 증가로 제주산 농산물 경쟁력이 강화</li> </ul> </li> </ul>
	<b>은행</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제주은행 신임 은행장 취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희수 신임 은행장이 '삼다삼무' 경영 방향 제시</li> <li>· 디지털 금융 확장과 소상공인 맞춤형 금융 서비스 강화 추진. 지역경제 회복과 은행 경쟁력 제고에 집중</li> </ul> </li> <li>- <b>농협 클린뱅크 인증</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 농·축협 4곳이 농협중앙회 클린뱅크 인증 획득</li> <li>· 자산 건전성과 연체율 관리 우수성으로 선정하며, 도내 금융 기관 신뢰도와 효율성 강화 사례로 주목받음</li> </ul> </li> <li>- <b>금융 사기 예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협 직원이 신속한 대처로 보이스피싱 피해 1,100만 원 예방</li> <li>· 고객 보호를 위한 지속적 대응과 금융 소비자 안전 강화를 위한 내부 교육 확대 계획</li> </ul> </li> </ul>

	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 주택시장 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월 제주 집세는 전년 동기 대비 0.8% 상승했으나 거래량은 감소</li> <li>· 상업용 부동산 투자 수익률은 전국 최저로 나타나며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된 상황</li> </ul> </li> <li>- 공공주택지구 네이밍 공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 삼다 공공주택지구가 최우수작으로 선정</li> <li>· 지역 상징성과 개발 컨셉을 반영한 사례로 평가받으며 신규 택지 개발 프로젝트와 연계 추진 예정</li> </ul> </li> <li>- 농산물 통합 물류사업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 농산물 통합물류사업이 서울 지역까지 확장되며 운송비 90% 지원 계획</li> <li>· 농가와 소비자 모두에게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는 유통 효율성 강화 사례</li> </ul> </li> </ul>
--	----	--------------------------------------------------------------------------------------------------------------------------------------------------------------------------------------------------------------------------------------------------------------------------------------------------------------------------------------------------------------------------------------------------------------------------------------------------------------------------------------------------------------------------------------------------------------------

○ 지역·사회 보도자료의 워드 클라우드를 살펴보면, 주요 키워드는 대통령, 눈이, 어선, 도로, 항공 등으로 나타남



[그림 3] 지역·사회 분야 뉴스의 Word-Cloud

○ 지역·사회 분야 보도자료의 세부 내용

지역·사회	대통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탄핵 관련 법적 절차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 지역사회에서 대통령 탄핵에 대한 법적, 절차적 논의가 이어짐. 시민단체 및 도민 의견 반영이 주요 이슈로 부각</li> <li>· 관련 법률적 대응에 있어 도민 참여 확대 및 정부 투명성 제고 요구 발생</li> </ul> </li> <li>- 정치적 영향과 여론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탄핵 과정에서 발생한 정치적 갈등이 지역 사회 내 여론에 영향을 미침. 도내 갈등 해소 방안 모색 필요</li> <li>· 탄핵으로 인한 정책적 공백 우려 속 제주 지역경제의 안정화 방안 검토</li> </ul> </li> </ul>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사회적 화합과 통합 방향</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탄핵 후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한 통합 전략 및 대화 프로그램 제안. 제주 지역 특성을 고려한 접근 필요</li> <li>· 지역 내 다양한 시민단체와 협력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신뢰 구축을 위한 공론화 추진</li> </ul> </li> </ul>
<b>눈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제주 폭설 대응 체계 강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폭설로 인한 산간도로 통제 및 교통 혼란 대처. 비상 대응 체계 가동</li> <li>· 도로 결빙 방지를 위한 제설제 투입 및 차량 안전 조치 강화. 대중교통 추가 투입 진행</li> </ul> </li> <li>- <b>산간 및 해안 지역의 재난 안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라산 및 중산간 지역의 눈 적설량 증가로 탐방로 폐쇄 조치. 대설주의보 발효</li> <li>· 폭설로 인해 발생한 안전사고 사례 증가. 예방법 및 대책 마련 필요</li> </ul> </li> <li>- <b>지역 경제와 관광에 미친 영향</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폭설로 인한 항공기 결항 및 관광객 유치 감소. 지역 경제 타격 예상</li> <li>· 관광 산업 회복을 위해 겨울철 자연 재해 대비 홍보 및 지원 정책 강화</li> </ul> </li> </ul>
<b>어선</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중국 어선 불법 조업 단속</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 어선이 제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 조업. 초과 어획량 적발 사례 증가</li> <li>· 해경의 강력한 단속과 관련 법적 처벌 강화 필요성 대두</li> </ul> </li> <li>- <b>원거리 조업과 안전 문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일 어업협상 미타결로 인해 대만 인근 해역까지 조업 확대. 원거리 통신 문제 심각</li> <li>· 어민의 생계 유지와 안전 확보를 위한 기술적 지원과 외교적 협상 필요</li> </ul> </li> <li>- <b>선박 전복 사고와 대응 체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만 인근에서 제주 어선 전복 사고 발생. 승선원 구조 활동 진행</li> <li>· 사고 예방을 위한 선박 안전 점검 강화 및 국제 공동 구조 체계 협력 확대</li> </ul> </li> </ul>
<b>도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겨울철 도로 안전 관리</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폭설로 인한 도로 결빙 문제 해결을 위한 제설 작업 및 차량 통제 시행</li> <li>· 산간도로의 월동장구 필수 장착 규정 강화와 대중교통 대응책 마련</li> </ul> </li> <li>- <b>AI 기반 교통 체계 확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한 AI 기술 활용. 스마트 교차로 시스템 도입</li> <li>·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정지선 계도 시스템 개선</li> </ul> </li> <li>- <b>긴급 상황 도로 복구 및 지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연재해로 인해 파손된 도로 복구 작업 속도 조절 및 도민 안전 조치 강화</li> <li>· 예산 배분 및 도로 개선 계획 수립을 통한 지역 접근성 향상</li> </ul> </li> </ul>
<b>항공</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항공기 결항 및 운항 혼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풍 및 폭설로 인한 제주공항 결항 사례 증가. 대체 교통 수단 마련 필요</li> <li>· 기상 조건에 따른 항공기 안전 매뉴얼 강화와 예보 시스템 개선 추진</li> </ul> </li> <li>- <b>항공 사고와 예방 조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리튬 배터리 관련 항공 사고 증가로 보안 기준 강화 필요성 대두</li> <li>· 항공기 안전 관리를 위한 정기 점검 및 승객 안전 교육 확대</li> </ul> </li> <li>- <b>제2공항 건설과 갈등</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 제2공항 조류 충돌 위험 문제로 환경단체의 반대 운동 강화</li> <li>· 지역 주민의 갈등 해소 및 제2공항 추진 방향에 대한 공론화 필요</li> </ul> </li> </ul>

## 2 해외(아시아) 정책동향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중국	<p>○ 문화 고품질 발전을 위한 경제 정책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 국무원은 문화 체제 개혁을 심화하고 문화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경제 정책 발표. 재정 지원, 세금 감면, 금융 서비스, 기술 혁신, 토지 보장, 소득 분배, 기업 전환 지원 등의 구체적 정책을 포함하며, 문화 창작과 공공 문화 서비스 개선, 문화 유산 보호 강화를 주요 목표로 설정</li> <li>- 정책은 문화산업의 창작 능력 향상을 강조하며, 문학, 예술, 출판, 영상, 애니메이션 등의 질적 성장 지원. 공공 문화시설의 접근성 강화 및 사회적 참여 촉진을 위한 지원 확대. 문화재 보호 및 합리적 활용을 통해 역사문화 도시 및 전통 마을의 지속적 보존 및 계승 추진</li> <li>- 금융 및 세제 측면에서 문화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기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연구소와 기술 혁신센터 구축 지원. 토지 이용 규정을 정비해 문화 기업의 합리적 토지 수요를 보장. 사업 전환 기업의 지속적 운영을 위한 재정 지원 유지</li> </ul>
	<p>○ 토지 비축 제도 개선을 위한 새 관리 방안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 자연자원부는 재정부, 인민은행, 금융감독관리총국과 공동으로 토지 비축 관리 방안을 개정 발표. 국토 계획과 연계하여 3년 단위로 토지 비축 계획을 수립하고, 활용도가 낮은 기존 건설용지를 우선적으로 비축하는 정책 방향을 제시.</li> <li>- 환경 오염, 문화재 유적, 광물층 존재 등으로 인해 토지 비축이 불가능한 경우, 사전 조사 및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비축을 제한. 비축된 토지는 소유권이 명확해야 하며, 비축 후 새로운 국가 건설용지 등록이나 담보 대출로 활용할 수 없음.</li> <li>- 재정 관리 강화를 위해 토지 비축 자금을 별도 관리하며, 토지</li> </ul>

**국가****제목 및 주요 내용**

매각 수익 일부를 국유 토지 수익 기금으로 적립해 비축 자금으로 활용. 중앙 및 지방정부가 협력해 토지 비축 자금의 효과적 운용 및 감독을 강화하는 공동 규제 시스템을 구축

○ **4대 데이터 체계 구축을 통한 디지털 경제 고도화 추진**

- 중국 정부는 데이터 시장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 소유권 인정, 시장 거래, 권익 분배, 이익 보호를 포함하는 ‘데이터 4차원 통합 제도’를 구축. 데이터 자산화 촉진과 공정한 분배 원칙을 통해 디지털 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방향 설정.
- 데이터 소유권 제도를 통해 데이터 생산자, 보유자, 사용자 간 권리 관계를 명확히 설정하고, 합법적 사용을 위한 법적 기반 강화. 시장 거래 규범을 정립하여 데이터 가격 책정, 거래 절차,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구축
- 데이터 이용 주체 간 공정한 이익 배분 체계를 마련하고, 개인 정보 보호, 데이터 보안 강화 등을 통해 데이터 사용의 신뢰성을 확보. 데이터 보호 제도는 분류 보호 체계와 위기 대응 시스템을 포함하여 국가 차원의 데이터 보안 전략 강화

○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육 혁신 촉진**

- 중국 정부는 교육 강국 건설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며,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육 개혁을 가속화하는 방안을 발표. 교육 디지털화를 통한 학습 방식의 다변화와 개인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여 인공지능 시대에 적합한 인재 양성을 목표로 설정
- 새로운 교육 체계 구축을 위해 교과 과정과 교재를 개편하고,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온·오프라인 학습 방식을 결합한 새로운 교육 모델 도입. 인공지능 기반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여 학습자의 문제 해결 능력과 창의성을 측정하는 평가 방식으로 전환 추진
- 교사의 인공지능 활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 교육을 확대하고, 연구기관과 기업의 전문 인력을 교사로 활용하는 방안

중국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b>중국</b>	<p>마련. 도시와 농촌 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클라우드 기반 교육 플랫폼을 활용한 교육 자원 공유 확대</p>
	<p>○ 탄소 감축 제도 및 규칙 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 정부는 탄소 배출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전국 탄소 시장을 강화하고, 제품 탄소 발자국 관리 시스템과 탄소 라벨 인증 제도를 구축하는 방안을 발표. 지속 가능한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관련 법제도 정비 추진</li> <li>- 국내적으로는 탄소 감축이 산업 전환의 핵심 요소로 작용하며, 시장 중심의 감축 메커니즘 강화 필요성 대두. 지방 정부 및 기업의 자발적인 탄소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 제공 및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 활성화 추진</li> <li>- 국제적으로 탄소 관련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중국은 글로벌 탄소 시장 및 무역 규범과의 조화를 이루면서 저탄소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 추진. 탄소 라벨 및 친환경 인증 제도를 확대하여 수출 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li> </ul>
	<p>○ 공공 데이터 활용을 위한 ‘1+3’ 정책 체계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 정부는 공공 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새로운 관리 지침을 발표하고, 공공 데이터 자원의 등록·운영·가격 책정 등 세 가지 핵심 정책을 포함하는 ‘1+3’ 정책 체계를 수립. 데이터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산업 발전 촉진을 목표로 설정</li> <li>- 전국적인 공공 데이터 등록 체계를 구축해 데이터의 투명성과 접근성을 개선. 공공 데이터를 민간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 원칙을 설정하고, 데이터 거래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가격 책정 체계 마련</li> <li>- 데이터 공유 활성화를 위해 기업과 연구기관의 참여를 장려하며, 데이터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적·기술적 장치 도입. 이를 통해 데이터 경제 발전과 국가 디지털 전환 가속화 기대</li> </ul>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중국	<p>○ 초고압 전력망 구축으로 서남부 지역 에너지 혁신 촉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은 2024년 말 ‘천연자원 및 경제 발전 고도화’ 를 목표로 하는 초고압 교류 전력망 건설을 완료하고, 이를 통해 서남부 지역의 전력 공급 안정성을 강화. 이 사업은 전력 기술 혁신과 경제 성장을 동시에 촉진하는 핵심 동력으로 작용</li> <li>- 이 전력망은 기존 송전망보다 더 높은 용량을 처리할 수 있으며, 청정에너지를 주요 도시로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설계됨. 기술 혁신을 통해 고산지대에서도 안정적인 전력 공급 가능성 확보</li> <li>-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산업 전반에 걸쳐 전력 비용 절감, 공업 생산 안정화, 청정에너지 활용 확대 등의 효과 기대. 전력 네트워크 확장을 통해 경제 성장 촉진과 신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li> </ul>
	<p>○ 중국 AI 기업 DeepSeek, 글로벌 AI 경쟁에서 두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 AI 스타트업 DeepSeek이 세계 AI 시장에서 화제를 모으며, 개방형 AI 모델을 통해 업계의 새로운 경쟁 구도를 형성. OpenAI와 경쟁할 만한 성능을 가진 DeepSeek-R1을 출시하며, 비용 절감 및 효율성 극대화를 통해 AI 혁신을 가속화 추진</li> <li>- DeepSeek은 인공지능 훈련 모델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통해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높은 성능을 구현. 미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도 AI 개발을 지속하며 기술 혁신을 추진</li> <li>- AI 개발에서 개방형(Open Source) 정책을 채택하여 학계 및 산업계와 협력 확대. 글로벌 AI 경쟁에서 중국의 기술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향후 AI 산업에서 중국 기업의 영향력이 커질 전망</li> </ul>
	<p>○ 중국은행, AI 산업에 1조 위안 금융 지원 계획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은행은 향후 5년간 인공지능 산업의 전반적인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최소 1조 위안 규모의 금융 지원을 제공할 계획</li> </ul>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b>중국</b>	<p>발표 기술 혁신과 산업 성장 촉진을 위한 맞춤형 금융 시스템 도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 지원은 연구개발(R&amp;D), 인공지능 인프라 구축, 데이터 센터 개발 등에 집중되며, 벤처캐피털 및 대출 지원도 포함. AI 기업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금융 및 정책적 지원 확대</li> <li>- 인공지능 기술의 실제 산업 적용을 촉진하기 위해 AI 기반 신산업(로봇, 바이오 제조, 신소재 등)에 대한 지원 강화. 글로벌 AI 산업 내에서 중국의 입지를 확고히 다지는 기반 마련</li> </ul> <p>○ <b>의약품 산업 반독점 규제 강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 정부는 의약품 시장의 독점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새로운 반독점 가이드라인을 발표. 주요 내용으로 가격 담합 방지,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금지, 공정 경쟁 원칙 강화 등이 포함</li> <li>- 제약업계에서 발생하는 가격 인상 및 공급 제한 등의 불공정 행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해당 기업에 대한 처벌 및 시장 조정 메커니즘을 도입</li> <li>- 제약 산업의 공정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시장 구조 개편 추진. 기업의 반독점 규제 준수를 장려하며, 혁신적이고 경쟁력 있는 제약 시장 조성을 목표로 설정</li> </ul>
<b>일본</b>	<p>○ <b>일본, 노토반도 관광 촉진 위해 ‘절경해도’ 조성 계획</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 국토교통성이 노토반도 관광 활성화를 위해 ‘노토반도 절경해도’ 조성 계획을 추진하는 방안 검토 시작. 해당 도로를 활용하여 해안 경관을 감상하고 지역 관광지를 연결하는 관광 도로 개발 추진. 노토반도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복구와 함께 관광 재개를 촉진할 정책 마련 계획</li> <li>- 일본 국토교통성 북북지방정비국이 도로 활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월 3일 전문가 검토회를 개최할 예정. 대학 관계자 및 지방자치단체 도로 담당자 등 16명이 참여하여 관광 및 지역</li> </ul>

**국가****제목 및 주요 내용****일본**

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로 인프라 개선 방향 논의 예정. 도로 시설 개선 및 자전거 도로 활용 방안 논의

- 노토반도 절경해도는 도로변 관광 인프라 정비, 주요 관광지 연결, 도로 환경 개선을 포함한 종합적 계획으로 추진될 전망. ‘길의 역’ 시설 확대 및 자전거 도로 홍보 등으로 지역 방문객 증가 목표. 도로 복구 사업과 연계하여 관광객 유입을 위한 지속 가능한 관광 모델 구축 계획

○ 후쿠시마현, 도요타와 수소 연료전지차 활용 실험 진행

- 후쿠시마현 건설국이 도요타자동차와 협력하여 수소 연료전지차 ‘MIRAI’ 를 활용한 전력 공급 실험 진행. 건설 현장 사무소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차량에서 전력을 직접 사용하여 실효성 검증. 연료전지차를 활용한 지속 가능 에너지 공급 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 수행
- 실험은 1월 14일부터 15일까지 후쿠시마현 스카가와시의 공사 현장에서 실시. 건설 현장 사무소에 실내 조명, 에어컨, 전기 포트 및 컴퓨터 등 다양한 전자 기기에 전력 공급. 총 16시간 동안 12.8킬로와트시 전력을 사용했으며, 최대 출력 2.5킬로와트 기록
- 실험 결과 전력 공급 안정성이 확인되었으며, 건설 관계자들은 연료전지차의 정숙성과 전력 공급 신뢰도를 높게 평가. 특히 주거 지역 공사 현장에서 활용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 제기. 향후 수소 연료전지차의 응용 범위를 확대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원으로 활용할 방안 연구 진행

○ 도쿠시마현, 한국 제주도와 관광·환경 분야 협력 강화

- 도쿠시마현과 제주특별자치도가 관광 및 환경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 수소 및 재생 가능 에너지 산업 발전을 위한 산·학·관 협력 활성화 목표 설정. 관광, 스포츠, 문화 교류 확대를 통해 양 지역 간 경제 협력을 증진하는 방안 논의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월 25일 체결된 양해각서에 따라 양측은 환경 기술 협력,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정책 교류 및 공동 연구 추진. 도쿠시마현과 제주도는 수소 에너지 개발 및 탄소 저감 기술 활용을 위한 협력 가능성 검토 지속 가능한 관광 모델 구축을 위한 전략적 협력 확대 계획</li> <li>- 양 지역 간 항공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국제 전세기 운항 추진 계획. 도쿠시마현과 제주도 간 직항 노선 개설 가능성을 검토 하며, 향후 정기 항공편 확대 방안 논의. 지역 간 관광객 유치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광 홍보 및 공동 마케팅 전략 수립 예정</li> </ul>
	<p>○ <b>일본, 노후 인프라 유지관리 위해 지자체 간 협력 필요성 대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 내 노후 인프라 문제 해결을 위해 국토교통성이 ‘지역 인프라군 재생 전략 매니지먼트’ 도입 추진.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해 도로, 교량, 하수도 등의 유지보수 비용 절감 및 효율적 관리 목표. 개별 지자체 차원에서의 대응 한계를 극복 하기 위한 광역 행정 협력 필요성 강조</li> <li>- 일본 전국적으로 노후 교량 수리가 지연되며, 2023년 말 기준 1만 개 이상의 교량이 보수 작업 미착수 상태. 기술 인력 부족과 재정 문제로 인해 지방정부 단독으로 유지보수 추진 어려움 발생. 국토교통성은 모델 지역을 선정해 시범 운영하며 실질적 문제 해결 방안 모색 예정</li> <li>- 국토교통성은 2025년 여름까지 구체적 시행 지침 마련을 목표로 검토회의 진행 중. 인프라 유지보수를 위한 국가 지원 확대와 지방정부 간 협업 모델 도입 필요성 강조. 행정 효율화를 위한 제도 개편 및 재정 지원 확대를 통해 지속 가능한 인프라 관리 체계 구축 목표로 설정</li> </ul>
	<p>○ <b>일본 오키나와, 관광객 대상 온라인 진료 서비스 시범 운영</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 오키나와현에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진료 서비스 실증 실험 실시. 관광객이 호텔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간호사가</li> </ul>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일본	<p>동행하는 이동 차량을 배치하여 원격 의료 제공. 의료 접근성이 낮은 관광 지역에서 야간 응급 의료 부담 완화 목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운영 시간은 목요일부터 일요일 오후 6시~10시까지, 토요일과 공휴일 전날에는 새벽 2시까지 연장. 차량에는 심전도 측정기, 산소포화도 측정기 등 의료 장비가 구비되어 있으며, 간호사가 측정한 데이터를 의사와 공유하여 진단 수행</li> <li>- 서비스 이용 비용은 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며 1회당 약 3만 엔으로 책정. 향후 보건 당국과 협의하여 보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할 계획. 관광객 편의성과 응급 의료 대응력 강화를 위해 시범 운영 결과를 반영하여 정식 도입 여부 결정 예정</li> </ul>
	<p>○ <b>일본 홋카이도 비에이정, 관광 과잉 대응 위해 신세 도입 계획</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홋카이도 비에이정이 관광 과잉 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운 세금 도입 추진. 연간 방문객 수가 지역 인구의 260배에 달해 인프라 유지 비용 증가 및 지역 주민 생활 부담 가중. 관광객 증가로 인한 도로 정체, 농경지 침입, 쓰레기 문제 등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li> <li>- 비에이정은 관광객이 주로 방문하는 ‘청의 호수’ 주차장 이용객을 대상으로 ‘지속 가능 관광세’ 부과 계획. 차량 종류에 따라 대형 차량 4,000엔, 일반 차량 1,000엔, 오토바이 300엔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 검토. 세금 수입을 활용해 관광지 환경 개선 및 유지보수에 활용 계획</li> <li>- 신세 도입을 위해 2025년 3월 조례안을 정식 제출하고, 2026년 4월부터 시행 예정. 일부 관광업계에서는 세금 도입이 방문객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 표명. 비에이정은 업계와 협의하여 세율 조정 및 관광 수용 능력 확대를 위한 정책 마련 추진</li> </ul>
	<p>○ <b>일본 이바라키현, 청년층 인구 유출로 인구 감소 심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 이바라키현의 2024년 인구 이동 조사 결과, 6,040명의 순 유출</li> </ul>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일본	<p>기록. 2023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하여 코로나19 이전의 인구 유출 수준으로 회귀. 10~30대 젊은 층의 유출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바라키현 대책으로 청년층 정착 유도를 위한 고용 창출 및 생활 환경 개선 계획 추진. 지사 대책 회의에서 지역 내 기업 유치 확대 및 청년층이 선호하는 산업 육성 필요성 제기. 대학 졸업 후 취업 기회 확대 및 지역 거주 매력 강화 방안 검토 예정</li> <li>- 도쿄권으로의 인구 유출이 지속되면서 이바라키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에서도 인구 감소 심화. 지방정부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며, 일본 정부의 지방 경제 활성화 정책과 연계한 대응 필요성 대두</li> </ul>
	<p>○ <b>일본 규슈전력, 조류 발전 실증 실험 본격 착수</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 규슈전력 자회사 규슈미라이에너지, 조류 발전 상용화 실증 실험 시작. 조류 발전기 ‘나루미라이’ 를 활용해 1,100킬로와트의 출력을 목표로 하는 실험 진행. 규슈 나가사키현 고토열도 해역에서 발전기 설치 및 운영 검증 실시</li> <li>- 조류 발전은 조류 흐름을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안정적 전력 공급 가능성 평가. 연간 예상 발전량은 241만 킬로와트시로 약 800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에 해당. 기존 500킬로와트급 실험보다 발전 효율 2배 이상 증가 예상</li> <li>- 일본 환경성이 조류 발전 실험을 지원하며, 2025년까지 실증 연구 지속 계획. 유럽에서는 조류 발전이 상용화 단계에 접어든 만큼, 일본 내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조류 발전의 가능성 평가 예정</li> </ul>
	<p>○ <b>일본 간사이 공항, 태양광 발전 도입으로 탄소 배출 절감 추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간사이 공항 운영사인 간사이 에어포트, 간사이국제공항 및 오사카 국제공항에 태양광 발전 시스템 도입. 총 4만 개 이상의 태양광 패널 설치 완료, 2025년 2월부터 본격적인 발전 시작. 연간 발전량 28.4기가와트시 예상, 공항 내 소비 전력의 20% 충당 목표</li> </ul>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간사이국제공항은 제2활주로 부근 미활용 부지 및 국제 화물지구 건물 옥상에 태양광 패널 배치. 연간 약 9,000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 생산 계획. 공항 운영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약 1만 2천 톤 감축 기대</li> <li>- 오릭스와 협력해 태양광 설비 도입, 총 50억 엔 투자. 항공산업의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해 친환경 에너지원 확대 추진.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6년 대비 50% 감축 목표 설정</li> </ul>
	<p>○ <b>일본 도쿄, 인구 집중 심화로 지방 인구 감소 가속</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 총무성이 발표한 2024년 인구 이동 통계에서 도쿄로의 순유입 증가, 인구 집중 심화. 도쿄도의 전입 초과 인구 79,285명으로 전년 대비 11,000명 증가. 수도권(도쿄, 가나가와, 사이타마, 치바)의 순유입 인구 135,843명으로 확대</li> <li>- 코로나19 이후 감소했던 도쿄 인구 집중이 다시 가속화, 2019년 수준으로 회복. 특히 20~29세 청년층의 수도권 유입 현상이 두드러지며, 전체 순유입의 약 88% 차지. 기업 및 대학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인구 유출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li> <li>- 지방 인구 감소 및 저출산 문제가 심화될 우려. 여성과 젊은 층이 도쿄로 이동하면서 지방에서는 미혼 남성 비율 상승, 출산을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 제기. 일본 정부의 균형 있는 지역 발전 정책 및 지방 중심 도시 육성 필요성 강조</li> </ul>
	<p>○ <b>일본 이시카와현, 노토 지진 피해 건물 철거 계획 수정</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4년 노토반도 지진 피해로 인한 공공 비용 철거 계획 조정. 이시카와현, 기존 예상보다 약 20% 증가한 39,235개 건물 철거 계획 발표. 2025년 10월까지 철거 완료 목표 유지, 예상 철거 일수를 14일에서 12일로 단축 조정</li> <li>- 철거량 증가로 인한 폐기물 처리 문제 대응책 마련. 재해 폐기물 예상량을 기존 332만 톤에서 410만 톤으로 상향 조정. 2024년</li> </ul>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b>일본</b>	<p>말 기준, 총 예상 폐기물의 28%인 113만 톤이 처리 완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폐기물 처리를 위한 운송력 강화. 해상 운송 선박을 기존 1척에서 3척으로 증강, 육상 운송 차량을 7,000대 추가 투입 계획. 일부 건물 소유주가 철거 신청 후 보존을 고려하는 사례 증가, 지방정부는 신중한 검토 요청</li> </ul>
	<p>○ <b>일본 가나가와현, 2024년 전입 초과 감소</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 총무성 발표에 따르면, 2024년 가나가와현의 전입 초과 인구 26,963명 기록. 도쿄에 이어 전국 2위지만, 2년 만에 감소세로 전환. 현 내 3대 정령지정도시(요코하마, 가와사키, 사가미하라) 모두 전입 초과 기록</li> <li>- 요코하마시, 전입 128,823명·전출 118,018명으로 순유입 10,805명. 가와사키시, 전입 80,420명·전출 73,959명으로 순유입 6,461명. 사가미하라는 3년 연속 순유입 감소, 전입 26,639명·전출 24,371명 기록</li> <li>- 가나가와현의 외국인 전입 초과는 7,494명으로 전년 대비 증가. 일본 국내 이주자는 감소하는 반면, 해외 이주자는 증가세 유지. 지방정부는 외국인 유입을 통한 경제 활성화 및 정착 지원 정책 강화 검토</li> </ul>
	<p>○ <b>일본 오사카부, 재난 지원 위해 드론 활용 협정 체결</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사카부, 스카이드라이브와 재난 시 긴급 물자 수송을 위한 드론 활용 협약 체결. 도로 단절 지역에 식량, 의약품, 생활 필수품을 공급하는 시스템 구축 목표. 2024년 노토 지진 당시 드론 수송이 효과적이었음에 따라 도입 결정</li> <li>- 협력사인 스카이드라이브, 최대 적재량 30kg의 드론 제공. 왕복 2km 비행 가능하며, 적재 중량에 따라 9~15분 비행 가능. 긴급 구호 물품 수송 외에도 재난 지역 정찰 및 피해 조사에 활용 계획</li> <li>- 2025년 3월 개정 예정인 지역방재계획에 드론 운용 포함 검토 오사카·간사이 엑스포(2025)에서도 드론 기술 시연 예정. 정부 차원의 방재 DX(디지털 전환) 정책과 연계해 재난 대응 체계 강화 추진</li> </ul>
	<p>○ <b>일본 요코하마, 해외 정부 관계자 대상 탈탄소 기술 전수</b></p>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JICA 요코하마센터, 아시아 및 중남미 6개국 정부 관계자 초청해 탈탄소 기술 연수 실시. 요코하마시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및 환경정책 소개. 민간기업 기술 활용을 통한 탈탄소 도시 구현 모델 공유</li> <li>- 참가국은 자메이카, 말레이시아, 멕시코, 파키스탄, 필리핀, 베트남 등 6개국. 2025년까지 탈탄소 사회 전환을 목표로 각국 도시 개발 담당자 연수 진행. 요코하마시가 추진하는 열에너지 집약 공급 시스템, 폐기물 관리 정책 학습</li> <li>- 2027년 요코하마 국제원예박람회(GREEN×EXPO2027) 대비 해외 홍보 강화. JICA 요코하마, 향후 지속적인 탈탄소 기술 전수 및 국제 협력 확대 계획</li> </ul>
	<p>○ <b>일본 후쿠오카시, 인공위성과 AI 활용한 상수도 누수 탐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후쿠오카시, 인공위성 영상과 AI 기술을 활용해 상수도 누수 탐지 시스템 구축. 특수 파장을 이용한 위성 촬영으로 지표면 수분 변화를 감지하여 누수 가능 지역 식별. AI를 활용해 누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자동 분석하여 조사 효율성 극대화</li> <li>- 기존 인력 중심의 누수 탐지 방식은 교통량이 많은 지역에서 한계. AI 기반 사운드 센서 도입으로, 새벽 시간대 누수 여부를 정밀 측정. 특정 지역에서 비정상적인 수압 변화를 감지하면 현장 조사 진행</li> <li>- 2023년 실험 결과, AI 분석을 통해 13곳 중 7곳의 누수를 정확히 탐지. 2024년부터 전 지역 확대 운영 예정. 인프라 유지 보수 비용 절감 및 상수도 운영 효율성 향상 기대</li> </ul>
	<p>○ <b>일본 후쿠시마현, 재생에너지 규제 강화 및 사업자 명단 공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후쿠시마현, 2024년 4월부터 재생에너지 관련 규제 강화 발표. 태양광 발전소 개발 과정에서 불법 시공으로 지목된 사업자 명단 공개. 재생에너지 사업에 따른 산사태 및 환경 훼손 방지를 위한 조치 강화</li> </ul>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지 산림개발 허가 기준을 개정, 소규모 발전소도 기존 시설과의 거리 제한 적용. 연 1회 진행되던 현장 점검을 2025년부터 연 2회로 확대. 개발 규정 위반 시 중단 명령 및 사업 정지 조치 가능</li> <li>- 후쿠시마현, 원전 사고 이후 재생에너지 도입을 적극 추진했으나, 사업자의 부실 공사 및 환경 문제 증가. 이에 따른 규제 강화로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개발 및 안전성 확보 목표</li> </ul>
태국	<p>○ 태국, 유럽과 첫 FTA 체결...무역·투자 확대 기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태국 상무부장은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 태국이 유럽과 맺은 첫 FTA로 글로벌 무역 플랫폼에서 태국의 위상 강화 및 외국인 투자 확대 목표로 설정</li> <li>- FTA 체결로 무역 기준이 향상되며, 향후 유럽연합(EU), 아랍에미리트(UAE) 등과의 FTA 체결 가능성이 높아짐. PCB, 데이터 센터, 인공지능(AI) 등의 신산업 분야 투자 증가 기대</li> <li>- 태국 정부는 협상 내용을 공개하고 의회 승인을 추진할 예정이며, 협정 이행 절차는 약 1년 소요 예상. 현재 17조 1,551억 원 규모의 태국-EFTA 간 무역이 더욱 확대될 전망</li> </ul> <p>○ 태국, 직장 내 AI 도입 수준 역내 국가들 대비 저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태국의 직장 내 AI 도입률이 21%로, 싱가포르(38%)와 말레이시아(37%)에 비해 낮은 수준을 기록. AI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지만, 직장에서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는 상황</li> <li>- 응답자의 85%가 AI가 교육 부문에서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으나, 일자리 대체와 기술 격차 확대에 대한 우려도 존재</li> <li>- 태국인의 75%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통제력이 부족하다고 인식하지만, 기업의 개인정보 접근을 더 쉽게 허용하는 경향이 있어 프라이버시 패러독스 현상이 존재</li> </ul> <p>* 프라이버시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에 부합하지 않게 행동하는 것을 프라이버시 패러독스(Privacy Paradox)라고 함</p>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b>필리핀</b>	<p>○ 필리핀, 세계은행 IFC와 아시아링크 통해 중소기업 대출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금융공사(IFC)는 필리핀의 여성 주도 영세·중소기업(MSME) 지원을 위해 아시아링크 파이낸스(AFC)에 1억 3,000만 달러(약 1,889억 원)를 투자</li> <li>- 필리핀 중소기업의 99%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지역별 대출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FC는 특정 지역 중심으로 금융 솔루션을 확대할 계획</li> <li>- AFC는 2028년까지 기업공개(IPO)를 추진할 예정이며, 2025년 순이익 목표를 22억23억 페소(약 548억572억 원)로 설정</li> </ul>
	<p>○ 필리핀, 반도체 산업 인센티브 도입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필리핀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해당 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도입 필요성을 언급</li> <li>- 반도체 산업이 필리핀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관련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하여 인센티브 제공 검토</li> <li>- 정부는 반도체 산업을 포함한 제조업 전반에 걸쳐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산업 성장 촉진 방안을 모색할 계획</li> </ul>
	<p>○ 필리핀, 2025년 해외 채권 발행 규모 축소 예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필리핀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을 고려해 해외 채권 발행 규모를 2024년 45억 달러에서 2025년 35억 달러로 축소 계획</li> <li>- 필리핀 정부는 국내 차입 확대를 검토하며, 경제 성장률이 2025년 최소 6%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li> <li>- 미국 금리 정책과 글로벌 경제 상황이 필리핀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필리핀 중앙은행은 금리 인하 및 통화완화 정책을 추진할 예정</li> </ul>
	<p>○ 필리핀 대통령, 테슬라에 전기차 생산기지 유치 제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필리핀 대통령은 테슬라의 전기차 생산기지 유치를 희망하며, 신규 테슬라 센터 방문을 통해 투자 유치 협상 진행</li> </ul>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필리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필리핀 정부는 전기차 소비세 면제, 충전소 설치 장비 무관세 등의 지원책을 제공하며, 2040년까지 전기차 점유율 50% 달성을 목표로 설정</li> <li>- 테슬라의 필리핀 진출은 지속 가능한 교통 시스템 전환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li> </ul>
인도네시아	<p>○ 인도네시아, 재정난 속 18조 8,400억 원 규모 지출 삭감 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2025년 정부 지출을 306조 7,000억 루피아(약 27조 원) 삭감하도록 지시. 이는 승인된 총 지출의 약 8%에 해당하며, 정부 운영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설정</li> <li>- 대통령은 의전 행사 및 출장 비용을 절반으로 줄이고, 무료 급식 프로그램에는 71조 루피아(약 6조 원)를 배정해 수혜 대상을 8,250만 명까지 확대할 계획</li> <li>- 경제학자들은 확대된 급식 프로그램이 인도네시아의 재정 건전성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으며, 정부는 2025년 예산 적자를 GDP 대비 2.53%로 전망하며 신중한 재정 운영을 강조</li> </ul>
	<p>○ 인도네시아, 원자재 기업에 외화 보유 규정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도네시아는 외환보유고 확충을 위해 원자재 기업들이 수출 수익을 최소 1년간 국내에 보관하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 발표</li> <li>- 수출기업들은 현금 흐름 관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며, 중앙은행은 기업들의 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 상품을 제공할 계획</li> <li>- 정책 시행 이후 석탄, 니켈, 팜유 등의 주요 산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li> </ul>
	<p>○ 인도네시아, 국제 탄소거래소 출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도네시아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제 탄소거래소를 공식 출범하고 해외 투자 유치에 나섬</li> <li>- 탄소 크레딧 판매 수익을 신재생에너지 전환에 투자하며, 2040년</li> </ul>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인도네시아	<p>까지 75GW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구축할 방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첫 거래에서 약 4만 1,000톤의 탄소 배출권이 거래되었으며, 향후 국제 기준과의 호환성 및 국내 거래 활성화가 과제로 지적</li> </ul>
캄보디아	<p>○ 캄보디아와 필리핀, 디지털 기술 이전 협력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캄보디아 우편통신부와 필리핀 정보통신기술부(DICT)는 디지털 플랫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li> <li>- 캄보디아의 '베리파이닷거브' 문서 검증 시스템과 필리핀의 '이거브 슈퍼앱'을 기반으로 기술 협력 확대</li> <li>- 디지털 정부 서비스 강화를 목표로 교육훈련을 추진하며, 향후 동남아 국가들과의 협력 확장 가능성도 제기</li> </ul>
말레이시아	<p>○ 말레이시아, AI 산업 투자 유치 본격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말레이시아 총리는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마다니 경제 프레임워크를 통해 AI 및 반도체 기업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발표</li> <li>- AI 법안 수립, 국가 AI 사무소 설립, 데이터 보호 조치를 포함한 국가 프레임워크 구축 계획</li> <li>- AI 기술을 교육, 의료, 블록체인 등 다양한 산업에 접목하여 말레이시아를 역내 AI 선도국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목표</li> </ul> <p>○ 말레이시아, 우즈베키스탄과 중소기업 및 프랜차이즈 협력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말레이시아와 우즈베키스탄은 중소기업 및 프랜차이즈 부문의 협력을 강화하고 무역·투자 확대를 추진</li> <li>- 양국은 경제 성장 및 외교 관계 강화를 목표로 새로운 무역 및 투자 기회를 창출할 계획</li> <li>-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2월 4~6일 말레이시아를 방문하여 ▲ 무역 ▲ 투자 ▲ 기술 분야 협력을 논의할 예정</li> </ul> <p>○ 말레이시아, 2028~2029년 선진국 도약 가능성 제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말레이시아 경제부 장관은 최근 경제 성장세를 고려할 때 2028~2029년 선진국 지위 획득이 가능하다고 전망</li> </ul>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말레이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 전문가들은 글로벌 변수에 따라 국가 경제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경제적 균형을 우선해야 한다고 지적</li> <li>- 정부는 지방과 도시 간 경제 격차를 줄이고 인프라를 개선하는 데 집중할 계획</li> </ul>
베트남	<p>○ 베트남, 해외 투자 유치에 위한 세제 혜택 및 수수료 인하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베트남 정부는 해외 투자 유치를 위해 증권시장 개혁을 추진하며, 펀드운용사에 대한 세제 혜택 및 수수료 인센티브 도입 계획</li> <li>- 증권위원회(SSC)는 투자자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간접 투자 자본 계좌 개설 규정 간소화 및 기업 영문 공시 의무화를 추진</li> <li>- 베트남은 '신흥 시장' 지위 획득을 목표로 하며, 이를 통해 50~60억 달러 규모의 해외 자본 유입을 기대</li> </ul>

\* 출처: 中国新闻网, 中国经济网, KIEP AIF, 日本經濟新聞